

사회 > **사건 · 사고**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강제조사 검토..."3번 출석 거부"

이달 23일까지 총 3차례 출석거부…"체포영장 가져와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1-06-29 11:08 송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2021.520/뉴스 1© News1 송원영 기자

경찰이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 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상대로 강제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지난 5월20일 경찰의 2차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달 23일까지 총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통화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를 하고 싶

다면 체포영장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차 소환조사 당일 오전 경찰이 그의 어머니와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에 반 발하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박 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자 경찰은 조만간 강제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 졌다. 박 대표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특별히 조사 불응 사유를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보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당기관지 노동신문에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는 담화를 게재하며 크게 반발했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하다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5월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고, 5월10일 1차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대표를 불러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량을 실제보다 수십배 부풀려 주장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포 시기도 박 대표의 주장보다 이전이며, 지역은 인천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